

# 광주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급증

## 전년비 89% ↑ ·매년 수백억 피해...계좌 발급 심사 강화 영향 검찰 사칭 가장 많아...경찰청 “역량 총동원 사기죄 발본색원”

# “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입니다. 3차고지 후 불응시 법령에 의거 긴급체포 수감 대상으로 전환됨을 고지합니다.” 광주에서 사는 조모(3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XX, 박XX 외 11명이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자에는 “2회에 걸쳐 지명통지서를 주거지로 발송했으나 발송처리로 부득이하게 통신고지 해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자택으로 해당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던 A씨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며칠 동안 고민에 빠

진 A씨는 관련기관에 문의한 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제서야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데다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등 갈수록 다양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대면 편취’가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

액은 78억5천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 금액 56억8천만원에 비해 38% 늘어났다. 전화금융사기 유형별로는 수급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이 241건으로, 지난해 127건에 비해 89% 증가했다. 반면 계좌이체형은 지난해 138건에서 올해 41건에 불과했다. 상반기 단속기간 중 피의자 검거 인원도 대면편취형이 1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보다 138.3%가량 폭증했다. 반면 계좌이체형 연루 피의자(계좌명의자)는 1년새 367명에서 32명으로 급감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총 3만1천681건으로 피해금액은 7천억원, 검거건수는 3만4천51건, 검거인원은 3만9천32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만7천814건, 피해금액 4천351억원, 검거건수 1만3천331건, 검거인원 1만2천421명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은 계좌명의자 집중단속, 통장개설 요건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계좌이체형’ 범죄에서 ‘인출(대면)편취형’ 범죄로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계좌이체형 범죄(7천688건→2천54건)는 73% 감소했으나, 인출(대면) 편취형 범죄(5천386건→1만2천893건)는 139% 증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대면편취형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뽑겠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사례와 같이 검찰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만4천65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1

만1천732건(83.4%)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5만13건) 중 15.4%인 7천712건으로 집계된 이후 2018년 21.7%, 2019년 22.4%, 2020년 4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이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칭기관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3천28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찰 사칭 287건(6.1%), 금융권 사칭은 256건(5.5%)으로 나타났다. /김동수기자



가금류 판매장 시 차단방역 1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시청산업과 직원들이 관내 한 전통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김에리 기자

## 경찰 ‘허위처방 의혹’ 척추전문병원 압색

경찰이 과잉진료와 허위처방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척추전문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진료 차트와 수술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병원은 값비싼 비급여 수술 재료를 허위로 처방해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병원 측이 처방했다는 수술 재료가 정작 수술 기록지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일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내부 고발인은 “허위 처방으로 남긴 재료를 의료업체에 반품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척추 수술의 남용을 막기 위해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 측이 요양급여를 삭감당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병원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을 소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 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속 의사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재영기자

살인 미수 10대 3명 구속 화순에서 사망 보합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구속됐다. 12일 고교 동창인 A(19)군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화순군 북면 한 펜션으로 유인한 포레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보험 설계사인 A군은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보합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맞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동수기자

## 18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 토대 증거조사 진행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한차례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항소심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연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밖에

도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수기자

## “고교생 사망, 교육청·학교 점검 부실 탓”

### 강민정 “현장실습 기업 실태 관리 부족...전형적 인재”

여수 현장 실습 현장에서 작업 중 숨진 고교생에 대한 사고 원인이 교육청과 학교 측의 점검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남 여수의 한 오토 정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정은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기업 실태 점검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장 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

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 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 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 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임채만기자

## ‘붕괴 참사’ 브로커 영장실질심사 예고 없이 불출석

공사수주 알선 대가 1억 수수 혐의 정구원 주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불출석했다. 주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실질 심사에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법원은 주씨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따라 13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주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모(74)씨와 함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에 밝혀낸 브로커 4명 중 마지막 신병 처리 대상자다. 앞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등 브로커 3명은 이미 구속됐고, 이 중 2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동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